

한국당 “임명 거부 5·18조사위원회 재추천” 또 어깃장

‘5·18망언’ 후폭풍 확산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이수가 정국을 흔들고 있다.

우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가 5·18 망언 및 왜곡 파동과 관련, 강력한 연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촛불 정국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5·18 민주화 운동 망언과 왜곡 움직임에 대해 “헌법정신 부정이자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문 대통령은 “5·18 민주화 운동을 오직 색깔론과 지역주의로 편을 가르고 혐오를 불러일으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단호하게 거부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실상 ‘자유한국당 심판론’을 제기했다.

이런 가운데 ‘꼼수 징계’ 등으로 파문을 키워온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임명 거부된 5·18 진상조사위원의 재추천을 시사하고 있어 정국의 파열음은 커지고 있다. 특히, 한국당 일부 전대 주자들은 여전히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5·18 망언 파문은 전대 이후에도 좁처럼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의장과 제가 방미중에 청와대가 5·18 진상조사와 관련한 국회 추천을 거부한 것은

나경원 “위원 자격 요건 충분”

여야4당 “추천권 반납하라”

전국 곳곳 망언 규탄 집회

지지율 추락 한국당 고립 자초

한마디로 청와대의 시각을 보여주는 대단히 무례한 사례”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역사왜곡 세력에 대한 프레임은 씌우는 그 정점에는 청와대가 있다”며 “한국당이 위원을 추천한 것은 지난 1월 14일인데 청와대는 한달을 넘긴 이후 위원자격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당이 추천한 이등욱 기사는 역사 고증 사료 편찬 연구활동 5년이란 요건을 충족한다”며 “권태호 예비역 중장은 진상조사 범위에 헬기 기총수사가 포함되어 있어 군 출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추천이며 연구활동 5년이란 자격 조건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이날 비대위 회의 등을 통해 ‘5·18 망언’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이번에 하나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우리가 잘못된 부분은 있지만 도가 지나치다”라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 관련해

서는 “5·18 폄훼” 논란이 일어나는 시점에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다 보니 답답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며 “대통령이 국회의 의견을 좀 더 존중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5·18 유공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5000명 가량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가 된다 면 국회의원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따져볼 수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입장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러한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입장은 정치적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것은 물론 민심 이반을 재촉하고 있다는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진상규명조사위원 추천권을 반납하라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심의 흐름도 심상찮다. 상송세를 보였던 당 지지율은 5·18 망언 파동 이후 하락세로 들어섰다.

이번 주말에는 여의도에서 5·18 왜곡과 망언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린다. 자유한국당이 진정어린 사과와 조치를 외면하면서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전당대회 결과와 망언 의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 여부, 진상조사위원 재추천 등이 5·18 망언 정국을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한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망언 3인방만 먼저” 한국 “서영교·손혜원 포함해야”

국회 윤리위 5·18 망언 의원 징계 논의 이견...내달 7일 재논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국회에서 간사회의를 열고 ‘5·18 모독 망언’으로 논란이 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했으나 첨예한 이견만 확인한 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 이에 윤리위는 오는 28일 간사회의를 열어 상정 안건을 확정하고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기로 했다.

이날 간사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먼저 다루자는 의견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재판정탁’ 논란의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손혜

원 무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포함해야 한다며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명재 윤리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늘 상정 안건을 확정하려 했으나, 3당 간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윤리특위에 회부된 징계안건을 처리하기 위해 다음 달 7일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다만, 계류 중인 28건을 일괄 상정해서

심의할지, 또는 일부분 우선 심의할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의견이 엇갈려 오는 28일 오전 8시 간사회의를 열어 다시 만나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 윤리특위에는 여야가 의결이 엇갈리는 이등욱 의원 외에도 한국당 심재철 의원은 재정정보 유출, 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용산참사 당시 과잉진압 논란 부인 등으로 각각 징계안이 계류된 상태다. /박지경 기자 jkpark@

고 김용균씨 유가족 만난 문 대통령 “공공기관 평가 생명·안전이 제1의 기준”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공공기관 평가 때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산업재해로 사망한 고 김용균씨 유가족을 면담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을 만나 “스물네살 꽃다운 나이의 김용균씨의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특히 첫 출근을 앞두고 양복을 입어보면서 희망에 차 있는 동영상을 보고 더 그랬다”며 “모든 국민들이 마음 아파했을 것”이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공공기관 평가 시 안전 평가 기준 적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생명 안전을 이익보다 중시하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공공

기관 평가 때도 생명과 안전이 제1의 평가 기준이 되도록 하겠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하며 “그렇게 해야 용균이가 하늘나라에서 ‘내가 그래도 좀 도움이 됐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7대 종단 종교지도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함께 염려하고 힘을 모아준 덕분에 한반도의 평화에 큰 발전이 있었다”며 “다음주에 열릴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와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큰 진전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공동성명(제1차 북미정상회담 공동합의문)의 구체적인 이행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내다봤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징계요구안 29건, 회의 한번 안열어... 있으나 마나한 국회 윤리위

‘5·18 모독 망언’ 파문의 장본인인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이 1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못하면서 ‘물 윤리특위’ 비판이 또다시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가 국회의원 징계안 처리를 두고 늑장대응을 일삼고 직무유기 태도를 보이는 등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윤리특위의 지난 통계를 고려할 땐 사실이다.

국회의 안정보시스템을 훑어보면 20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로 넘겨진 의원 징계요구안은 총 29건이다. 이 중 3건은 자진 철퇴해 현재 26건의 징계안이 계류 중이다. 그러나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이후 징계안 심사를 위한 전체회의는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후반기에만 총 8건의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가운데 ‘5·18 망언’ 논란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음에도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날

전체회의 일정이 부러부러 잡힌 정도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여론의 비판을 의식한 듯 “ 그동안 윤리위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는 말이 나왔는데 이번만큼은 국민의 관심을 의식하고 이른 시일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통틀어 윤리특위는 지금까지 2년 10개월간 단 한 건도 징계안을 가결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징계안 중 대부분은 국회의원 임기 말까지

결론을 내지 않고 묻어뒀다가 폐기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앞서 19대 국회에서는 39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특위는 지난 2015년 성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던 심학봉 의원의 제명안 단 한 건만 가결했을 뿐이다. 18대 국회 역시 총 54건의 국회의원 징계안이 접수됐으나 윤리위는 2011년 성희롱 파문을 일으킨 강용석 의원 제명안 단 한 건만 가결했다.

국회 내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국회법 개정 목소리가 나오곤 했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QR code and text: **예능야**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Advertisement for 'Damyang-gun' brand. Text: 소비자 선택한 2019년 가장 기대되는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브랜드 대상 '담양군'. 전라남도 담양 '메타세쿼이아길'. Includes a logo for '천년담양' (천년담양) and a background image of a tree-lined path.